

북일 경제 관계와 경제 제재 완화

나카가와 마사히코 /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재서울 해외 파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가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아주 작은 수준이어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에 의하여 일본과 경협하게 될 미국 상품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을 기본으로 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를 이유로 북한에 대하여 경제 관계를 새롭게 통제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가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경제 제재 완화는 경제 제재와 같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대상국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 혹은 금지시키는 조치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 제재 완화가 다른 나라와 그 대상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할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우선 북한과 일본 사이의 경제 관계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북한과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와 정치적인 효과로 나뉘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1995년 1월 20일의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보다 1994년 10월 21일의 미국과 북한과의 경제 제재 완화에 관한 합의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일 경제 관계의 문제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가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때, 일본은 미국과 달리 북한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무역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종전에는 COCOM(對公産權 수출통제위원회) 규제, 오늘날에는 바세날협약 또 국내적으로 무기 수출 3원칙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 북일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북미 경제 관계는 아주 작은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을 기본으로 한 동맹 관계에 있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를 이유로 북한에 대하여 경제 관계를 새롭게 통제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으로 무기·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외에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또 북한 정부도 일본 제품 수입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1956년 9월 22일 일본의 민간 단체인 일조무역회사가 북한의 조선무역회사와 상품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60년대 말에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계 설비 수출에 무역 보증을 부여하고, 그것을 담보로 일본수출입은행 용자를 받는 것도 허가하였으며, 북한쪽이 2년 이상의 연불하는 계약도 허가하였다. 1971년 1월 23일에는 일본의 여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이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협회와 「무역 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여 3월 1일 東京에 북한 무역대표부의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조선수출입상사'가 설립되었다. 1973년에는 북한에 대한 기계 수출 4건에 대하여 일본 수출입은행 용자가 있었고 시멘트 플랜트 수출에 대하여 8년간의 연불 계약의 허가가

나왔다.

제도적인 기초가 이렇게 정립되고 계속 확대해왔던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1974년에 전환점에 들어갔다 1974년 여름에 북한쪽

의 무역 대금 지불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구서독, 영국 등도 북한과의 무역에 대하여 무역 보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무역 업자 대표들과 북한의 조선 무역은행은 1976년 12월에 북한이 무역 대금 지불을 2~3년 연기시키는 리스케줄에 합의하였지만, 북한쪽은 이를 거의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79년 10월에 1980~89년의 10년간으로 지불하는 두번째 리스케줄이 되어서, 북한쪽은 지불을 다시 시작하여 1983년 6월까지 원본 금리 계 400억 달러를 일본에 송금했다. 그러나 1983년 봄에 북한은 지불을 1986년 이후로 연기시키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세번째 리스케줄이 되었다. 1983년 10월에는 버마(현 미얀마)에서 한국 정부 고관들이 사망한 폭발 사건이 발생하므로,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공무원 출입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북한도 지불을 정지시켰다. 그때부터 북한의 일본에 대하여 누적된 채무 800여억 엔이 오늘날까지 미불로 되어 있다.

무역 대금 지불 정지는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1986년에 북한쪽의 미불을 건디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무역 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320억 엔을 통산성으로부터 받았다(무역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을 회수하고 통산성에 반납할 의무가 있음). 이리하여 북한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신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북한을 상대로 거래하는 회사는 재일조선인 기업들로서 80% 이상이(정확한 수치 불명) 되었다.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 자본 유치에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대북한 투자도 재일조선인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북한의 합영 사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1986년에 북한과 공동 출자로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조총련은 1989년에 합영 기업에 대한 용자 목적으로 '조선합영은행'을 북한과 공동 출자로 설립하였다.

오늘날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1996년까지 564억 엔 정도의 무역 거래와 1993년까지의 누계 3,561만 달러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80% 이상은(정확한 수치 불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무역 대금 지불 정지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기업외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개하고 투자 활동에 참여하게 될 가장 주요한 조건은, 북한이 일본 기업들에 대하여 미불한 800여억 엔의 무역 대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명) 재일조선인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일조선인 기업외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개하고 투자 활동에 참여하게 될 가장 주요한 조건은, 북한이 일본 기업들에 대하여 미불한 800여억 엔의 무역 대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파급 효과는 거의 없음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의 기초로 된 「북미기본합의문」(1994년 10월 21일에 서명됨)은 통신 서비스와 금융 결제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해소를 포함한 '무역과 투자의 장벽' 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1995년 1월 20일에 통신 회선 개설, 통상 및 금융 거래 금지의 일부 해제,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의 일부 해제 등 구체적인 경제 제재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관한 파급 효과, 금융에 관한 파급 효과, 기타 무역·투자의 북일 경제 관계에 대한 영향 유무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북 경제 제재 완화의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 북일 사이의 통신 서비스 관계는 본래 북일 관계 개선 진전에 따른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 달러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는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통신 서비스, 금융 등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에 의하여, 북한과 미국은 1995년 4월에 AT&T社에 의하여 직통 전화가 연결되었다. 일본과의 직통 전화 개통은 북일 수교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북일간 정치적 관계 개선과 통신량 증가 전망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고, 북미 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다. 즉, 북일 사이의 통신 서비스 관계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진전에 따른 것이어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 달러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미국 내에 북한 재산 동결 해제는 북한의 해외 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약간 해소시킬 계기가 된다.

북한의 미국 달러 결제가 용이하게 되면, 달러 결제의 거래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에 예상되지만, 북한의 외환 지불 능력 자체가

크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또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미 1990년 4월에 개업된 조선합영은행이 일본의 아시카가(足利)은행과 직접 송금을 취급해왔고,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일본과 북한의 송금 수수료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로 동결이 일부 해제된 미국내 북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북한 채권을 가진 은행들인, 호주·네덜란드은행, 러시아대외무역은행 등이 총 13억 7,000만 달러의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중앙일보」(1996. 7.17)). 북한의 미국내 재산은 총계 1,1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고, 외국 은행들의 채권에 비하면 너무 적은 규모이다. 미국내 북한 재산 동결 해제는 외국 은행들과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의 해결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여억 엔의 무역대금 미불이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회수도 어려운 미국내 북한 자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후 재일조선인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왔지만, 재일조선인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해나가게 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무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일 만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는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통신 서비스, 금융 등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일 수교에 간접적인 영향

재일조선인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 활동을 확대시킬 근본적인 조건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북한의 무역 대금 미불 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 외화 보유 상황으로 보아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 하에서는 새로운 투자와 지분을 연결시키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경제 구조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로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무역 대금 미불 문제는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에 의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자금 공여로 해결됨에 따라, 무역 보험이 부활되고 특혜 관세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 활동을 확대시킬 근본적인 조건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북한의 무역 대금 미불 문제의 해결이다. 이 문제는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에 의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자금 공여로 해결됨에 따라, 무역 보험이 부활되고 특혜 관세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은 냉전 종식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지만, 미국의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은 냉전 종식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지만, 미국의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북경에서 1988년 12월 6일부터 북한과 참사관급 비공식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12월의 미국·구소련 수뇌에 의한 냉전 종식 선언이 나오기 전에 미국은 벌써 북한과 관계 개선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접촉은 1988년 10월 19일에 한국 정부가 남북, 미국, 구소련, 중국, 일본 등으로 구성된 '6者 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것과 관련된 미국의 조치였는데,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1990년 1월 5일의 접촉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보증조치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 요구를 거절한 대신,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응하게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이 1990년 9월 24~28일의 일본 자민당·사회당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이러한 긴장 완화가 없었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완화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되었다. 이리하여 1990년 5월 28일에 북한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해를 송환하였고, 또 핵문제에 관해서는 7월 15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면 IAEA와 보증조치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5~6일에 진행되었고, 또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이 1990년 9월 24~28일의 일본 자민당·사회당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이러한 긴장 완화가 없었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완화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IAEA 사찰을 받았지만, IAEA도 미국도 사찰 진행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서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긴장이 커졌다. 북한은 4월 10일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6월 21~22일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은 차관급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1992년 10월 27일에 모든 남

북 대화의 증거를, 11월 5일에 일본과의 수교회담의 결렬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가 실현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암시한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 상태는, 북한이 NPT에 잔류하고 자체의 원자력 관련 시설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한 「북미기본합의문」이 1994년 10월 21일에 조인되므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였던 정치 실력자인 가네마루가 1992년에 실각하고, 1993년에는 자민당 단독 정권이 붕괴되어 수교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시킬 정치 세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1994년 3월 28~30일에 연립 여당인 자민당·사민당·사きが게 3 당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5월 26일에는 북한이 일본에 대하여 쌀지원을 요청하고 북한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 사이에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음에도 본 회담은 아직 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북한과의 수교 문제에 관한 일본 국내 여론도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일본 사람들의 문제가 1997년 3월에 부각됨으로써 더욱 나빠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조정하면서 수교를 추진시킬 만한 정

치적인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수교 문제에 대한 「북미 기본합의문」 조인의 파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한편, 운송 분야에서는 약간의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 항공기 운행에 관해서는 이미 수교 협상이 시작되었고, 바로 1991년 1월 23~24일에 북경에서 열린 운수 관계자의 항공 협상을 통해 일본의 나고야와 니이가타를 평양과 직접 연결시키는 항공로 개설·운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미국과 「북미기본합의문」을 조인한 후, 1994년 12월 8일에 해외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영공의 개방과 함께 북경·평양·도쿄 직행 항로의 설정을 발표하였다. 이 항공로가 운행되면 도쿄와 북경 사이의 항공로를 단축시키고 또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조치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의 기초가 된 「북미기본합의문」 조인에 따른 긴장 완화가 초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파급 효과가 나타날 조건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서 통신 서비스나 금융 분야의 연결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이전에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지만,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를 규정한 「북미기본합의문」 조인이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통한 경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조건은 일본에 수교를 추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남북 대화의 재개도 수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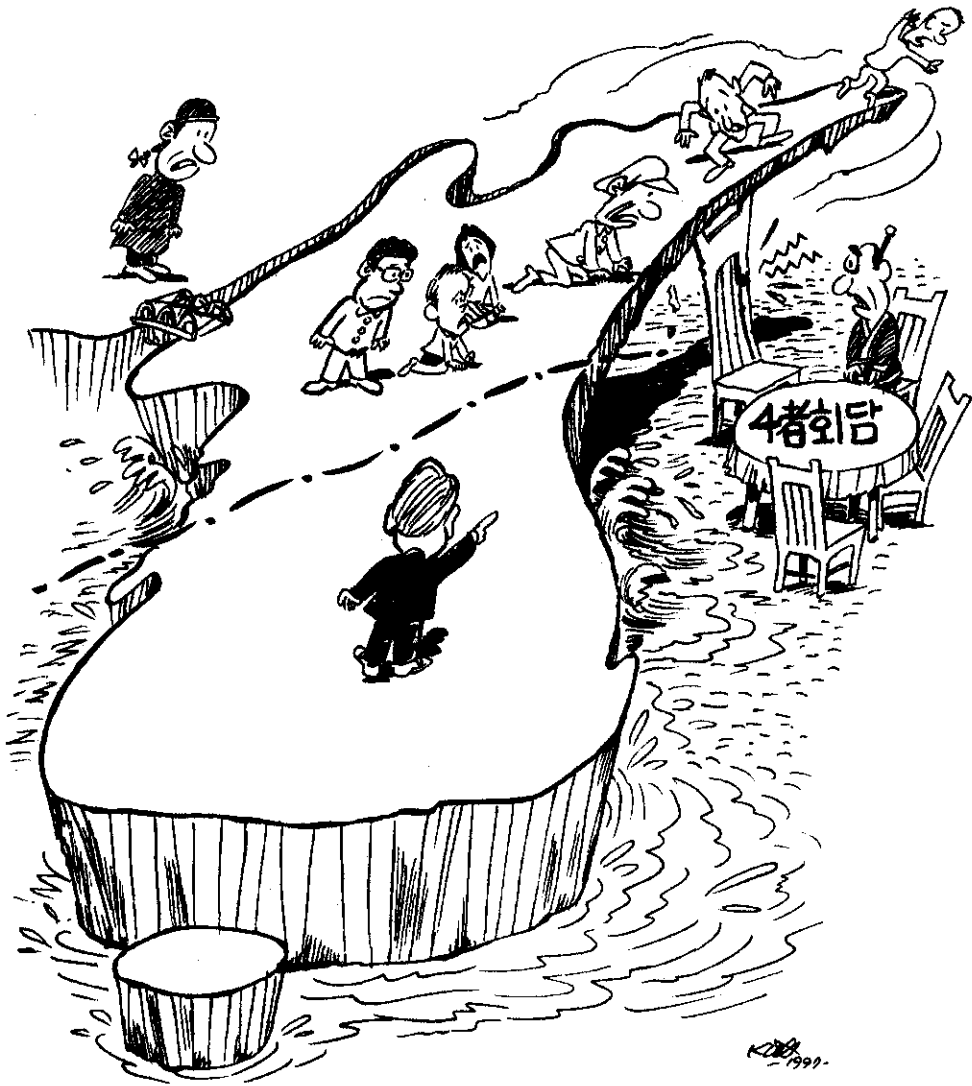
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전혀 받지 않았고,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 해제도 북한의 일본에 대한 무역 대금 미불 문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지만,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를 규정한 「북미기본합의문」 조인에 따른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완화는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 협상 재개의 필요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교는 북한의 무역 대금 미불 문제를 해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교를 추진시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정치 세력을 상실하여 수교의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북미기본합의문」 조인의 수교 문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미기본합의문」 조인이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통한 경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조건은 일본에 수교를 추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남북 대화의 재개도 수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漫評〉 ③〇



“무게를 지탱할것은...”